

여야 'IAEA 보고서' 격돌... "답정너 반대" vs "강통 보고서"

국힘 "불신·선동 조장, 국제 망신 초래"...IAEA 공신력 부각 여론전 민주 "검증조차 안 된 결과에 우리 영해·생명 통째로 맡길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 보고서를 두고 5일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회의는 IAEA의 공신력을 부각하면서 여론전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IAEA 보고서의 신뢰성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여당 압박에 나섰다.

국민회의는 이날 IAEA 종합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을 강조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울산시청에서 열린 울산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일본 IAEA 보고서를 '강통 보고서'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당은 IAEA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반발하고 있고, 심지어 정당한 국제기구 분담금마저도 뇌물이라고 선동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제사회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며 "IAEA 보고서를 못 믿겠다"는 야당이야말로 '답정너' 반대, '답정너' 선동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이어 "야당이 이렇게 불신과 선동을 조장하는 것은 과학의 문제도 아니고 외교의 문제도 아니고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며 "광우병 괴담은 이명박 정부를 탄핵하려는 목적이었고, 이번 오염수 괴담 선동 역시 윤석열 정부의 타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중 의원이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유엔 산하 국제기구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면 국격에 안 맞지 않겠다"라며 "아쉽지만,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TF 위원인 홍석준 의원이 MBC 라디오 '김종배

의 시선집중'에 출연, "민주당이 소위 메시지를 비판하는 식으로 IAEA를 몰고 늘어지고 있는데 정말 국제 망신을 초래할 행태"라며 "현재 IAEA 보조금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인데 일본이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국민회의는 방시능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없더라도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해수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각 부처에 수산업계 지원 대책 검토를 주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IAEA의 종합 보고서를 두고 '일본 맞춤형 용역 보고서'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검증조차 안 된 결과에 우리 영해와 생명을 통째로 맡길 셈인가"라며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은 원내대표도 "IAEA 보고서에 검증 보고서가 아니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용역 보고서와 같은 수준"이라며 "IAEA는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해, 보고서가 일본 정부의 핵 물질 해양 투기 보증을 거둘 수 없음을 고백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국 동의 없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히고 "민주당은 오염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 방류를 막고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진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먼저 '야4당 연대'를 강화하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원 모임을 발족하기로 했

다"며 "이 모임을 주축으로 국제기구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위해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등 전담적 비상 행동을 준비, 실행하겠다"며 "단식 농성뿐 아니라 모든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비상적

행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피켓 시위를 하고, 일본 정부에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민주당 의원들 반성·혁신 촉구

광주전남지역위원회 출범

광주서 1차 정치혁신 토론회

30% 컷오프·3선 초과 제한 제시

더불어민주당 진명(칭 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더혁신회의)가 5일 광주에서 광주전남지역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1차 정치혁신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출범 선언을 통해 "현 정권의 퇴행적 국정운영이 거듭될 수록 제1야당 민주당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지만, 민주당은 대선 이후 어떠한 집단적 성찰이나 혁신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현역 의원들의 반성과 혁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180석을 갖고도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촛불 개혁의 적기를 놓치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책임을 인정하고 성찰해야 한다"면서 "이는 의원 중심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따른 것으로, 의원 집중제를 해소하고 120만 권리당원 중심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대중 정당으로 과감하게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기득권을 타파할 수 있는 총력적인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험적상 호남 공천 혁신은 수도권 전체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특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여진 토론회에서 민주전국혁신회의 최용선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호남 정치혁신의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총선 승리와 당 운영 혁신을 위한 10대 혁신안을 제시했다.

공천 혁신안으로는 ▲지역위 당무감사와 평가 결과 대외 공개 ▲현역 국회의원 하위 30% 컷오프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한과 미이행 선수(選數)에 따라 감정 페널티 ▲비례대표 전당원 투표제 도입 ▲단체장 임기 중 출마 시 감점 25% (득표수 기준)에서 30%로 상향 ▲지역위원장의 권리당원 정보 독점과 경선 과정 이중투표 방지 등을 요구했다.

당 운영 혁신안으로는 ▲권리당원 투표를 통한 전국대의원 구성과 중앙위원 선출 ▲권리당원의 사·도당 상무위원회 참여 ▲권리당원 당비 납부기간 등 의무 강화 ▲민주연구원 분원 설치 등 지방분권형 운영을 제시했다.

더혁신회의는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이 상임운영위원장을 맡아 지난날 출범했다.

이날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 조직을 꾸리고 운영위원 1000여명을 모집해 오는 8월 17일 서울에서 전국 운영위원 대회를 열 계획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현역 복무연장 불가능... 여성 징병 시기상조"

이기식 병무청장

이기식 병무청장은 5일 일각에서 병역자원 감소 대책으로 제기한 여성 징병제 도입과 현역 복무기간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기식 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역병 복무기간 연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단축됐던 복무기간을 늘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기간은 1993년부터 26개월을 유지해왔으나, 2003년 병역 부담 완화 차원에서 24개월로 줄었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18개월이 유지되고 있다.

이 청장은 여성 징집제에 대해서도 "시기상조인 것 같다"며 "다구나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에 여성을 징병한다는 것은 사회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미 1차 병역 자원감소는 끝났고 2030년대 중반까지는 현 수준의 병역자원

이 유지된다"며 "그 이후의 병역자원 감소에는 '국방혁신 4.0'에서 추진 중인 무인화·과학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연예인의 입대와 관련한 국의 논란에 대해서는 "병역의 의무는 국의 보다는 공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청장은 "국익 차원에서 BTS의 군 복무를 면제해주는 것이 선례가 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모든 의무자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연말 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의 입대를 앞두고 국력을 높인 BTS에 병역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 청장은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BTS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하는 것이 병무청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 금당부동산 •

도시형 생활주택 등 (나주시)

- 대지 954㎡ (상업지 288.6평)
- 건물 2,254㎡ (681.84평) 지상 5층, 2022.4 준공
- 도시형 생활주택 42세대, 오피스텔 7실 근린시설 73.4㎡
- 매도 45억 (감정 50억, 대출 25억)
- 임대 보증금 2억8천 원 월세 2,400만원 포함
- 이전은 법인이전가능하고 사업부지와 교환도 가능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울포해수욕장인근)

- 경관 수려, 다세대, 숙박시설·펜션 등 적합
- 445평과 210평, 도로 좋음, 평당 100만원

무안군 운남면 내리 3,940㎡ (1,191평)

- 공시가 45백 527천원 전원생활적합, 1억1,900만원

무안군 청계면 강리길 바닷가매지 대지 850.6㎡ (257평)

- 집 83㎡ 다세대분양 적합, 은행 5천 매도 2억7천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바닷가 접 땅 4,650㎡ (1,406평)

- 공시가 7,527만원, 투자에 좋음, 매매가 1억6천

화순군 동면 장동리 (776평)

- 조용한 생활적합, 7,200만원

고흥군 도화면 사리리 전 포함한 산 47,537㎡ (14,380평)

- 투자 등 적합 1억5,500 (평당 10,778원)

전화 062-222-4994 / 010-2632-5659
FAX 062-222-4993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3-1314호

봉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약식평가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제5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봉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약식평가서)"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광주광역시

-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봉산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나.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산22 일원
다. 사업면적 : 238,335.0㎡
(공원시설 184,414.0㎡ + 비공원시설 53,921.0㎡)
-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1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2023. 7. 06. ~ 2023. 8. 03.(21일간)
나. 공람장소 : 광양광역시 도시공원과, 광산구 공원녹지과, 첨단2동행정복지센터, 신장동 행정복지센터
다. 정보통신망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http://www.eiass.go.kr)
- 주민설명회 개최**
가. 일시 : 2023. 7. 17.(월요일) 10:00 ~
나. 장소 : 첨단2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24번길 24
-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2023. 8. 10. 까지)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한 서면제출
다. 제출처 : 광양광역시 도시공원과, 광산구 공원녹지과, 광산구 공원녹지과, 첨단2동주민센터, 신장동 행정복지센터
라. 제출의견 : 환경영향평가(약식)에 대한 의견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의견 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청 도시공원과(☎ 062-613-44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